



李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해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시스

野, 국회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대회

장동혁 "몸통은李 대통령" 공세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속직 다음 날 휴무도 없애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

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효성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최고세율 25% 공감 속 野 "조건없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공방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대, 최고세율 25% 의견 모아 대주주 대한 양도소득세에 맞춰

국민의힘 "배당성향 따져선 안 돼" 부자감세 논란 지속… "신중해야"

◆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